KASPA
KJG PUBLIC ADMINISTRATION ACADEMY

2018 국가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8.8.18 시행)

출제평 〈선행정학 100% 적중〉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018 국가7급 행정학은 최근 치러진 다른 행정학 시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출제되어 체감난이도가 9급과는 상당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정형화된 기출문제(변형포함)는 6문항 정도에 불과했고 그동안 빈출되었던 A, B급 주제에 대한 출제비율이 70% 정도였는데 이처럼 기출문제와 A, B급주제의 출제비중이 줄어들면 수험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대체로 높아지게 됩니다. 분야별로는 정책학에서 무려 5문항이나 출제되었고 지방자치편에서도 4문제나 출제된 반면 그동안 많은 출제비중을 차지하던 총론분야는 단1문항에 그쳤습니다.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예산	환류	자치
1문	5문	3문	3문	3문	1문	4문

기출	변형	신경향
3문	3문	14문

A급	B급	C급	D급
11문	3문	5문	1문

이번 국가7급 행정학은 각종 행정이론이나 제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터치한 신경향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단편적인 암기나 정형화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은 약간 고전하였을 것이고 심화위주로 좀 깊이 있게 이해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은 충분히 고득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2의 신엘리트이론문제, 문7의 정책변동문제, 문14의 비용편익분석문제, 문15의 공직자행동강령문제, 문16의 지방채문제, 문17의 주민참여예산문제, 문18의 정부간관계문제, 문20의 재정건전화문제 등이 약간 난이도가 있고 생소했을 수가 있는데 이해위주의 수업을 통하여 이론을 정확히 숙지한 수험생이라면 정답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선행정학 커리를 밟은 수험생이라면 대부분 강의나 교재에서 강조했던 부분이어서 무난히 고득점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행정학시험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하여 난이도를 대체로 중상정도로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난이도 조절의 방법으로 종합형문제, 숫자문제, 응용문제, 법령문제를 포함하여 여태까지 출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출제될 수도 있는 경계문제(나올락 말락하는 언저리 부분), 즉 빈출범위를 약간 벗어나면서도 의미있는 새로운 내용들(약간 지엽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경계문제)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대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 고득점은 어려워집니다. 물론 시험에 임박해서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야겠지만 평소 심화이론이나 기출수업때는 그런 언저리(가장자리)내용을 다루어주는 완성도 높은 강의를 접하는 것이 고득점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문14의 비용편익분석문제, 문15의 공직자행동강령문제, 문16의 지방채문제, 문18의 정부간관계문제, 문20의 재정건전화문제 등이 이러한 유형의 문제로 이들 문제에서 고득점 여부의 운명이 갈렸을 것 같은데 선행정학 수업에서는 충분히 수업때 강조했던 부분이라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예 :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도 지방채발행이 가능하다 / 중앙정부도 최근 참여예산 도입되었다 /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다 / 개별적 지정주의는 지정된 것 외에는 못한다 / 칼도어힉스의 보상기준은 능률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기준이다 / 지방에 대한 것은 기재부가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모두 관할한다....등등 수업때 강조한 내용들이 부디 시험장에서 모두 떠올랐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7급시험도 중반을 지나고 마지막 지방7급 시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좋지 않은 수험생들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가오는 지방7급 시험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정진하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수험생이 있다면 남은 기간 지금이라도 빠르게 기본이론을 새롭게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김중규 –

01. 행태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②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④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답] ③ 행태주의는 가치판단요소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행정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여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 위주의 연구를 지향한다.

☑ ① [O] 행태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한다.
②④ [O] 행태주의는 인간행태에 존재하는 규칙성과 인과성을 발견하고자 논리실증주의를 적용한다.

● **행태주의의 특성**

① 자연과학적 연구 – 사회 현상 = 자연현상
② 논리실증주의 – 주관과 의식 배제
③ 태도, 의견, 개성을 행태에 포함
④ 인과성 전제 – 행태의 규칙성을 경험적으로 입증
⑤ 가치중립성 – 가치와 사실의 구분(정치행정신이원론), 반규범적 바이어스
⑥ 계량적 분석
⑦ 방법론적 개체주의 – 집단의 고유특성 불인정
⑧ 학제적 접근 – 연합학문적 연구
⑨ 종합적 관점 – 고전과 신고전의 통합
⑩ 보편성 및 객관성 – 개별국가의 특수성 불인정

✎ 2018 7급 선행정학 p.126

02.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②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③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④ 엘리트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답] ② 신엘리트이론은 일종의 무의사결정론(바흐라흐 & 바라츠)으로 엘리트들이 자신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도전해오는 불리한 문제가 제기되지 못하도록 이를 기각·방치시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을 말한다. 단순히 사회적 지위나 명성에 의하여 엘리트들의 권력행사를 파악하려고 했던 밀즈(Mills)나 헌터(Hunter)의 초기 미국 엘리트이론이 엘리트에 의한 또다른 측면의 권력행사를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엘리트들의 은밀한 권력에 의한 의도적 무결정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신엘리트이론은 유럽의 고전적 엘리트이론과도 다르지만 밀즈나 헌터의 엘리트이론과도 다르다.

☑ ① [O] 신엘리트이론은 엘리트들에게 불리한 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을 의미한다.
③ [O] 신엘리트이론은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연구한 권력의 두 얼굴모형(1962)을 통하여 연구되었다. 권력의 두 얼굴이란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얼굴과 밝은 얼굴을 말하는데 다원주의는 이중에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문제들만 의제화된다는 밝은 얼굴측면만을 고려하였다고 비판한다.
④ [O] 엘리트는 불리한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분석방법론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엘리트이론은 실증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 **국가론(정책의제론의 주요모형)**

다원주의	이익집단이 의제 주도, 국가는 수동적 심판관	신다원론	국가가 능동적 개입
선량주의	엘리트들이 일반 대중 지배	신엘리트주의	무의사결정론(권력의 두 얼굴)
마르크스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도구(K.Marx)	신마르크스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국가주의(베버주의)	정부 관료제의 절대적 자율성(M.Weber)	신베버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Krasner)
조합주의	국가가 이익집단을 지배·억압	신조합주의	중요 산업 조직(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강조

✎ 2018 7급 선행정학 p.208

O3.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만 묶은 것은?

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ㄴ. 공정거래위원회
ㄷ. 특허청
ㄹ. 국가기록원
ㅁ. 국립중앙박물관
ㅂ. 문화재청

① ㄱ, ㅂ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ㄹ, ㅁ

[답] ④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ㄹ. 국가기록원, ㅁ. 국립중앙박물관이다.

☑ ㄱ [O]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부속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
ㄴ [X]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ㄷ [X] 특허청은 산업자원통상부 소속 외청이지만 소속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다.
ㄹ [O]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물을 관리·보존하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다.
ㅁ [O]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다.
ㅂ [X]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외청이지만 소속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다.

✎ 2018 7급 선행정학 p.408

O4.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 결정과정을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② 정책의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③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④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답] ② 혼합주사모형은 정책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에 의하여 결정하되 근본적 결정은 모든 대안에 대하여 결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세부적 결정은 한정된 대안에 대하여 걸과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절충적 의사결정모형이다.

☑ ① [X] 사이버네틱스모형의 설명에 해당한다.
③ [X] 회사모형의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④ [X] 사이버네틱스모형의 특징에 해당한다. 사이버네틱스모형에서의 의사결정자는 사전에 설정된 한정된 주요변수와 레퍼토리에 따라 결정하며 다른 새로운 정보는 무시하는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 **에치오니(A.W.Etzioni)의 혼합주사모형의 기본논리**

결정의 유형	모형	고려할 대안의 범위	분석할 대안의 효과
기본적 결정	합리모형	모든 대안	개략적 검토
세부적 결정	점증모형	한정적 대안	면밀한 검토

✎ 2018 7급 선행정학 p.255

O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②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답]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공공기관은 지방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KASPA
KJG PUBLIC ADMINISTRATION ACADEMY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공공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 · 복리증진 · 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① [O]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정의로 맞는 지문이다.
② [O]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정의로 맞는 지문이다.
③ [O] 공공기관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 **공공기관의 유형(실정법상 구분– 2018기준)**

공기업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공항공사(인천국제, 한국), 부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주) 등 5개 발전회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강원랜드 등(총 15개)
	준시장형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위탁집행형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재정정보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기타[1]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1) 정원 50명 미만의 공공기관

✎ 2018 7급 선행정학 p.418

06.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②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③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④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외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답] ② 준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험으로 진실험에 비하여 외적 타당성(일반화의 가능성)은 높지만 내적타당성(실험의 정확도)은 상대적으로 낮다.

☑ ① [X] 외적타당성이 아니라 모두 내적타당성 저해요인이다.
③ [X] 호돈효과(실험직전 반응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내적타당성이 아니라 외적타당성 저해요인이다.
④ [X] 실험의 정확도에 관한 설명으로 외적타당성이 아니라 내적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 **타당도의 유형**

구성적 타당도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평가기획)가 이루어진 정도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
내적 타당도	조작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인 원인(외생변수)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조작화된 처리(원인변수)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외적 타당도	실험결과를 다른 상황에까지 일반화(이론화)를 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

● **타당도의 저해요인**

내적 타당도	선발요소(선정요인), 선정효과, 역사적 요소, 성숙효과,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상실요소,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검사)요소, 측정도구의 변화(신뢰도), 회귀인공요소, 오염효과
외적 타당도	호돈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표성 부족, 크리밍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2018 7급 선행정학 p.304

07.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②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③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linear) 승계에 해당한다.
④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답] ① 정책혁신이란 정부가 지금까지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정책이나 활동은 물론 이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예산이 전혀 없는 "무(無)"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한다고 표현된 ①은 틀리다.

☑ ② [O] 정책종결은 정책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이나 예산 모두가 중단되는 것이다.
③ [O]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수단을 대체하는 것은 선형적 승계로 정책승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정책대체라고도 한다.
④ [O] 정책유지는 현재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지만 정책수단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정책변동의 유형**

구분	변동여부		
	정책목표	정책의 근본적 성격	정책수단
정책혁신	○	○	○
정책승계	×	○	○
정책유지	×	×	○
정책종결	○	○	○

● **정책승계의 유형**

정책대체	정책목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책내용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정책승계이며 선형적 승계라고도 한다.
부분종결	일부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정책유지+정책종결)
복합적 정책승계	정책유지, 정책대체, 정책종결 또는 정책추가 등 3개 이상의 정책승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우발적 정책승계	타 분야의 정책변동에 연계하여 우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부수적, 파생적 승계)
정책통합	유사한 목표를 가진 2개의 정책이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되는 것
정책분할	정책담당기관의 분리 등으로 하나의 정책이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것

✎ 2018 7급 선행정학 p.308

08.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기부여의 강도를 산정하는 기본개념으로 유인가(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을 제시하였다.
ㄴ.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 조직원의 노력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든 직무를 다섯 가지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분했다.
ㄷ. 개인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ㄹ.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누고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ㅁ.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변화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답] ① 동기이론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 있는데 내용이론은 전통적인 동기이론으로 욕구의 내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과정이론은 현대적인 동기이론으로 동기부여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위 보기에서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이론은 ㄱ의 기대이론, ㄴ의 직무특성론, ㄷ의 공평성이론이다.

☑ ㄱ [O] V.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ㄴ [O]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주로 내용이론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정이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ㄷ [O] Adams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ㄹ [X] Alderfer의 ERG이론으로 욕구이론에 해당한다.
ㅁ [X] 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으로 욕구이론에 해당한다.

● **동기부여이론 체계**

내용이론	합리적 · 경제인 모형	X이론, 과학적 관리론
	사회인 모형	Y이론, 인간관계론
	성장이론	인간의 성장 중시(X→Y), 고급욕구 중시, 행태론 ① Maslow의 욕구단계설 ② Murray의 명시적 욕구이론 ③ Alderfer의 ERG이론 ④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⑤ McGregor의 XY이론 ⑥ Likert의 관리체제이론 ⑦ Argyris의 성숙미숙이론 ⑧ Herzbereg의 2개요인이론
	복잡인 모형	욕구의 복합성과 개인차를 고려하는 Z이론, 상황적응론 ① E.Schein의 복잡인 모형 ②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③ Z이론 : Ouchi의 Z이론
과정이론	기대이론	① Vroom의 동기기대이론 ② Porter&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③ E.Berner의 의사거래분석 ④ Georgopoulos의 통로 · 목적이론 ⑤ J.Atkinson의 기대모형
	형평성이론	Adams의 공정성이론
	목표설정이론	Locke의 이론
	학습이론	고전적 학습이론 – 조건화이론(Skinner의 강화이론) 현대학습이론 – 자율학습이론(인지학습이론 등)

✎ 2018 7급 선행정학 p.330

09.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② 내용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③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하여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
④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재시험법(test-retest)과 동질이형법(equivalent forms) 등이 사용된다.

[답] ②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의 일치여부(상관계수)를 통하여 타당도를 측정하려는 것은 내용타당도가 아니라 기준타당도에 해당한다. 내용타당도는 기준에 의한 성적을 확보하기 힘들 때 시험내용과 직무내용을 분석하여 이들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타당도이다.

☑ ① [O] 시험의 타당도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③ [O]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신뢰도란 측정도구가 갖는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의 형식, 시기, 공간 등에 있어서 얼마나 규칙성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④ [O]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반분법(내적일관성 검증방법), 형식변환법(동질이형법), 재시험법 등이 있다.

● **시험의 효용도**

타당도	측정하려는 것(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의 정도
신뢰도	시험이 측정도구(형식, 시기 등)로서 가지는 일관성 (타당도의 필요조건)
객관도	채점의 공정성 (신뢰도의 한 조건)
난이도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혼합비율의 적정도 (변별력)
실용도	실시 비용의 저렴성 및 실시와 채점의 용이성

● **시험의 타당도**

구분	개념	판단기준	검증방법
기준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실적 예측여부	시험성적 =근무성적	예측적 검증(합격자) 동시적 검증(재직자)
내용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 측정 여부	시험내용 = 능력요소	내용분석(by 전문가)
구성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관련된다고 믿는 이론적 구성요소 측정 여부	시험내용 = 이론적 구성요소	논리적 추론 · 수렴타당성(동일여부) · 차별타당성(상이여부)

● **시험의 신뢰도검증방법**

반분법	공간적 일관성	횡적 일관성 검증
형식변환법	형식의 일관성	
재시험법	시기의 일관성	종적 일관성 검증

✎ 2018 7급 선행정학 p.516

10.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② 엽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③ 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문제의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인사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 · 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 · 통합 · 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답]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예산, 보수, 조직, 정원 등의 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성과중심의 조직관리방안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 2007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도입되었다.

☑ ① [O] 직업공무원제도는 전문직업주의 구현에는 기여하지만 행정의 전문성(전문행정가주의)은 저해한다.
② [O]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선거나 정당을 통하여 공무원집단이 국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구현할 수 있고 정치권과 행정부 간의 관계도 원만하게 되므로 정책수행과정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다.
③ [O] 임용할당제인 대표관료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므로 역차별의 논란과 실적주의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1960년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우리나라에서는 균형인사제도의 형태로 도입되었다.

✎ 2018 7급 선행정학 p.551

11. 지방재정의 구성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 · 조성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
②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③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

[답] ④ 의존재원이란 자치단체가 상급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조정재원으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교부되므로 재정상 통제가 수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를 저해한다.

☑ ① [O] 의존재원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차원의 재정통제와 통합성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② [O]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③ [O]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적 최저(National minimum)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 2018 7급 선행정학 p.819

12.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득세	ㄴ. 자동차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ㅁ. 등록면허세	ㅂ. 주세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ㄹ, ㅂ

[답] ④ 보기 중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ㅂ. 주세 등이다. 나머지는 모두 지방세에 해당한다.

☑ ㄱ [X] 지방세 중 보통세
ㄴ [X] 지방세 중 보통세
ㄷ [O] 국세 중 보통세
ㄹ [O] 국세 중 보통세
ㅁ [X] 지방세 중 보통세
ㅂ [O] 국세 중 보통세

● **지방세 세목체계**

	구분	도세	시 · 군세	특별시 · 광역시세	자치구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 2018 7급 선행정학 p.824

13.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가?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①	90일	40일	30일
②	90일	50일	30일
③	120일	50일	40일
④	120일	50일	30일

[답] ③ 국가재정법 상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지방자치법상 지방예산은 광역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초단체의 경우 4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예산제출 및 의결 시한**

	중앙정부예산	지방정부예산
제출시한	120일 전	광역:50일전, 기초:40일전
의결시한	30일 전	광역:15일전, 기초:10일전

✎ 2018 7급 선행정학 p.596

14.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과정에서 실제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②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③ 칼도-힉스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④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답] ③ 칼도-힉스보상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능률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회총편익이 사회총비용보다 크다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분배정책의 비용편익분석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며 형평성이나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다.

☑ ① [O] 잠재가격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활용할 수 없을 때 분석가가 가치를 주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② [O] 내부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들어 주는 때의 할인율로서 순현재가치(B-C)를 0으로, 편익비율비(B/C)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④ [O]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표현하되, 무형적인 것은 물론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평가기준	개념	특징
순현재가치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B-C 〉 0 이면 타당성 O (가장 일반적 기준)
비용편익비율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B/C 〉 1 이면 타당성 O (이차적 · 보완적 기준)
내부수익률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같게 해주는 때의 할인율	예상(기대)수익율 내부수익률이 높을수록 좋다.
자본회수기간	투자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짧을수록 좋다. (단, 할인율이 높을 때는 단기, 낮을 때는 장기투자가 유리)

✎ 2018 7급 선행정학 p.224

15.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②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답] ④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으로 2003년 노무현정부 때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 ① [O]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의무에 관한 기준으로 맞는 지문이다.
② [O]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부정청탁에 관한 지문으로 맞는 지문이다.
③ [O] 우리나라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공무원 윤리의 법적 근거**

자율규제윤리	공무원헌장	
법령적·강제적·규제윤리	헌법	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①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② 복종의무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④ 친절 · 공정의무 ⑤ 종교중립의 의무 ⑥ 비밀엄수의무 ⑦ 청렴의무 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⑨ 품위유지의무 ⑩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⑪ 집단행위금지 ⑫ 정치활동금지 ⑬ 선서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② 선물수수의 신고 · 등록의무(미화 100불 이상) ③ 취업제한의무(재산등록의무자) – 퇴직 후 3년 간 ④ 이해충돌방지의무 ⑤ 주식백지신탁의무(1급 이상)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① 공직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내부고발자 보호제도) ②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의무(퇴직 후 5년 간) ③ 국민감사청구제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정무직, 4급 이상 공직자, 법관, 검사 등과 공직후보자의 병역신고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①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 금지 ②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금지 :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 처벌 ③ 위반행위 신고의무

✎ 2018 7급 선행정학 p.573

16.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②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답] ③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거나 외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행안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발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① [X] 자치단체조합의 장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안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② [X] 지방채의 차환(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는 것)을 위하여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X]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18 7급 선행정학 p.837

17.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②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③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④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답] ③ 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로 결과보다는 과정지향적인 예산이다. 신공공관리론의 산물이었던 신성과주의예산이 효율과 성과라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예산이었다면 주민참여예산은 재정거버넌스(재정상 협치)의 산물로 예산편성과정의 민주화를 중시하는 예산이다.

☑ ① [O]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② [O]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통적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2006년 시작되었지만 중앙정부의 경우 최근 2018.1부터 제도화되었다.
④ [O] 주민참여예산은 주로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참여를 의미한다.

✎ 2018 7급 선행정학 p.720

18. 정부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③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답] ③ 영국의 경우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개별적 지정주의를 취하므로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되며 중앙정부도 수권하지 아니한 사무는 위임할 수 없다.

☑ ① [X]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정부의 규모도 작았고 권한도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별도의 상호작용 없이 각자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② [X]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이 아니라 홈룰(Home-rule)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딜런의 규칙은 지방정부보다는 주정부의 권한을 우선시 하고 반대로 홈룰의 법칙은 주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우선시한다.
④ [X]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 중반 호소카와 내각이후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추진해왔다.

● **개별적 지정주의의 장단점**

장점	① 사무배분이 명확하여 중복이 거의 없다. ②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책임한계가 명확 ④ 자치행정기능이 광범위
단점	① 지나친 개별성과 특수성의 강조로 통일성 저해 ② 융통성이 결여되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③ 개별법을 제정하는데 지나친 정력 소모

● **포괄적 예시주의의 장단점**

장점	① 권한부여방식이 간편 ② 융통성과 탄력성이 높음
단점	① 사무구분이 불명확 ②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한계 모호 ③ 사무처리의 중복 발생 ④ 상급단체의 무차별적인 통제·감독 초래하여 자치권이 제약

✎ 2018 7급 선행정학 p.778

19. 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답]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도 사경제주체로써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처리대상 민원이나 민원인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① [O] 민원행정은 정부와 고객인 국민 간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므로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② [O]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O] 민원행정은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민원 행정의 기능**

① 경계작용으로서의 기능
②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③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
④ 주민참여의 기능
⑤ 행정신뢰성 제고수단으로서의 기능

✎ 2018 7급 선행정학 p.716

20.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③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답] 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정건전화의 한 수단으로 국가는 국세감면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이다.

☑ ② [O]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의 공식채무에 포함된다.
③ [O] 보증채무부담행위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O]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8 7급 선행정학 p.593